외국인 유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 특성과 외국인 정착 수준을 중심으로

The Impacts of Foreign Inflows on the Economies of Depopulating Regions: Focusing 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Foreign Settlement

김지훈·이주환

초 록

인구감소지역에서 내국인 정주인구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인구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생활인구의 경제효과는 단순한 유입 규모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외국인이 지역에 거주하는지, 일정 기간 체류하는지, 단기간 방문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외국인을 노동이주 중심으로 다루거나 생활인구를 단일 집단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착 수준별 효과를 산업구조와 함께 검토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1개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단기체류인구·장기체류인구로 구분하고, 산업 LQ지수를 활용한 군집분석으로 지역을 관광산업·1차산업·제조업·비특화 군집으로 유형화한 후 임의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생활인구의 경제효과는 정착 수준과 산업구조의 결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책이 단순한 유입 규모 확대를 넘어, 산업특화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관광산업 특화지역에서는 단기 방문 유치에서 체류형 소비 전환으로, 1차산업 특화지역에서는 계절적 노동수요와 지역 생활권 편입의 연계로, 제조업 특화지역에서는 정주형 외국인의 장기 정착과 지역 소비기반 강화로 정책 방향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인구감소지역의 법제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 이 현상이 심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2. 주민등록인구 지표의 한계

인구감소지역에서 단기간의 주민등록인구 유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도시계획적 접근을 위해 실질적 활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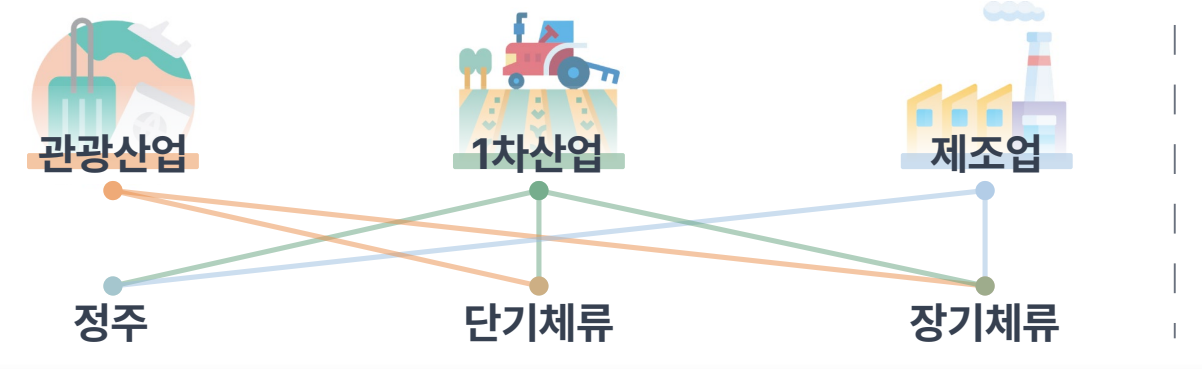
3. 인구 Minus-sum 게임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주민등록인구 유치 경쟁은 Zero-sum을 넘어 Minus-sum 게임으로 나아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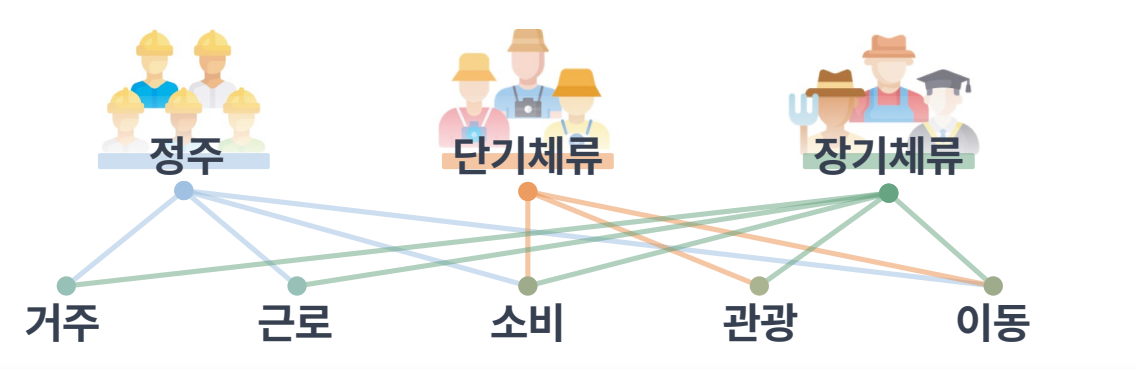
생활인구 등장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 체류인구 + **외국인 체류인구** + **등록외국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히 외국인 생활인구는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부상

지역의 **특화산업**에 따른 **외국인 정착** 차이



외국인 **정착 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차이



외국인이 지역경제와 맺는 관계는 지역 산업 특성과 정착 수준에 따라 차이 존재

연구의 필요성

기존 연구의 공백	외국인을 **단일 집단**으로 취급 지역의 **산업 구조적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은 채 평균적 효과 추정에 머무름 거시적 지표 위주로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의 효과는 실증적으로 규명되지 않음
정책적 수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은 **외국인 유치**를 **인구감소 대응 전략**으로 채택 중 그러나 어떤 유형의 외국인을 유치해야 실질적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근거 부재 **전략 없는 외국인 유치**는 지역 특성과 부합하여 기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 존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생활인구를 정착 수준에 따라 구분
지역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 지역별로 어떤 외국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
각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 유치 전략을 제언**

II. 문헌연구

- 외국인 정주인구 정책의 흐름

	정책 유형	대표 정책	주요 내용
1990s	제도기반 형성	• 출입국관리법 체계 운영·개정 • 산업연수생제도	• 외국인 유입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관리 • 산업현장 인력 부족 대응이 핵심 목적 • 지역 정착보다 체류자격 및 노동력 관리 성격
2000s	정책기반 제도화	• 고용허가제(EPS), 방문취업제(H-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노동력에서 국내 생활 영위 인구로 제도화 • 취업·체류·사회통합·생활 적응 지원 통합 확대 • 관리 중심에서 정착 지원으로 확장
2010s	정책 체계화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국가 차원 기본계획 중심으로 체계화 • 농어촌·비수도권의 노동수요 대응 정책이 확대 • 외국인 유입과 지역경제 및 산업 유지 연결
2020s	지역 특화형 정책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지역특화형 비자(지역특화 우수인재·숙련기능인력)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 외국인을 지역소멸 대응의 자원으로 인식 •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 •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 강화

- 외국인 체류인구 정책의 흐름

정책 유형	대표 정책	주요 내용
제도기반 형성	• 관광특구 제도 • 한국방문의 해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초기 제도·캠페인 기반 형성 • 특정 지역 장기체류보다 방한 수요 확대 • 외국인 방문을 관광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삼음
체류목적 다변화	• 한국방문의 해 • 인천공항 환승관광 • 외국인 의료관광 제도화	• 단순 방문객 → 환승·의료 목적 체류자 유치 • 공항 경유객을 실제 관광·소비로 연결 • 의료서비스 + 관광 결합 방문형 체류정책 등장
지역 분산 및 체류 확대	• Korea Grand Sale • 관광거점도시	• 단순 관광객 규모 증가 → 장기체류 + 소비 강화 • 서울 집중 관광수요 지역 분산 정책 기조 강화 • 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
지역 직접유치	• (강화군)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원 • (가평군)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하동군)외국인 포함 단체관광 인센티브 • (완도군)외국인 유치 체험상품·단체관광 인센티브	• 외국인 관광객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직접 유치 • 여행사·숙박·체험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광객 지역 유치를 도모 • 외국인 방문객을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로 전환

정주·체류 외국인 유입 정책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여겨지며, 지역화되는 추세

- 외국인 유입 관련 연구의 흐름

주제	주요 내용	분석 대상	분석 방법	주요 변수	출처
지역 특성에 따른 외국인 유입과 지역발전	• 외국인 유입은 지역발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효과는 인구·산업·생활·정책 등 지역특성과 상호작용	비수도권 시군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모형, 매개효과모형)	지역발전(GRDP) 지역 특성 (인구특성, 공간특성, 산업특성, 경제특성, 정책특성)	김민곤 외(2025) 백기홍(2025) 송선영·남진(2025) 유광철·오동훈(2014)
외국인 유형에 따른 외국인 유입과 지역발전	• 지역별 높은 영향을 주는 외국인 유형 존재 • 외국인 수의 단순 증가보다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필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모형)	지역발전 (GRDP, 세입) 외국인 유형 (단순기능인력, 전문기능인력, 결혼이주 외국인, 유학생 등)	유광철·오동훈(2014) 황난숙·홍준현(2024)
외국인 유입의 종류와 특성	• 외국인 활동은 거주·노동·여가 차원에서 표출 • 외국인 활동은 관광과 이주로 구분 • 지역 인구·사회경제적 구조 이주 수요에 영향 •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의 지출 패턴 상이	-	설문조사 문헌연구	비수도권 시군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손정렬(2024) Hasan et al.(2021) Williams and Hall (2000)
외국인 유입 관련 정책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외국인 활용 전략 논의 • 이민정책은 유입→정착→통합의 틀에서 시행 • 지역별 현황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필요	-	문헌연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선영(2024)

- 생활인구 관련 연구의 흐름

주제	주요 내용	분석 대상	분석 방법	주요 변수	출처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 생활인구·체류인구 증가는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 • 문화시설은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 • 인구감소지역 시·군·구는 산업 특성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뚜렷한 유형 차이를 보임	강원도 시군구 전국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다중회귀분석	지역경제 (재정규모, 총매출액) 지역 특성 (인구 특성, 공간 특성, 관광 특성)	윤병훈 외(2024) 이훈(2024) 정주원·이아라(2022)
생활인구와 정책	• 1인당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증가 시 체류인구 유입 비중 증가 •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체류인구 유입에 유의한 영향을 줌 • 생활인구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정책 수립 필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고정효과모형	생활인구 유형별 비중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정액·사업수	방보람 외(2025) 임태경(2024a) 임태경(2024b)
체류인구의 특성	• 생활인구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개념 • 체류인구는 지역 외부자원으로 활용 가능 • 생활인구 유형(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별 지역 내 체류경험이 상이함	인구감소지역 전국 기초자치단체	문헌연구	체류기간 체류목적 방문빈도 계절성	방보람 외(2025) 안소현 외(2023) 이제승 외(2024) 임태경(202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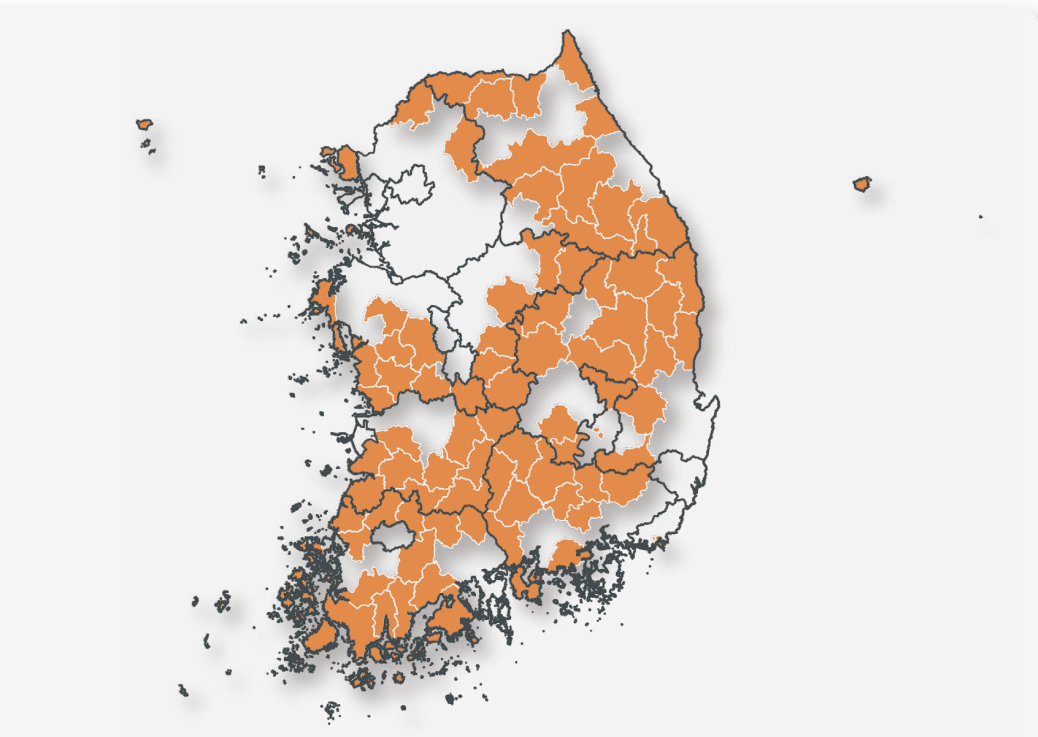
외국인 유입은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이나, 외국인 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

연구의 차별성

1. 연구대상	2. 공간 범위	3. 분석 관점	4. 모형 구조
등록외국인 또는 생활인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뤄옴	전국·비수도권 전체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일부만을 다뤄옴	노동이주·정주 중심 또는 생활인구 일반 효과 분석 주류	단일 효과 추정 또는 제한된 지역 특성 고려
↓	↓	↓	↓
외국인 생활인구를 정주·단기/장기체류인구로 분리해 직접 비교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	**외국인 정착 수준별 경제효과와 그 차이 분석**	**외국인 정착수준과 함께 산업 특성 반영**

III. 연구 방법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2024년 1월 ~ 2025년 9월 **총 21개월**

-조작적 정의

생활인구
체류인구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 체류인구 **외국인 단기체류 인구** **외국인 장기체류 인구** + **외국인 정주인구 (등록외국인)**

* 일별 평균 체류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3일 기준

정착수준별 외국인 생활인구 세분화

-분석 방법론

1. 현황분석

- 분석방식: 주요 변수 **공간분포 및 기초통계량** 분석
- 외국인 생활인구 ↔ 인당 매출액 관계 파악
- 정착 수준별 외국인 분포의 지역 간 비대칭 파악
- 정착 수준별 분포와 산업특화지수 관계 분석

2. 군집분석

- 분석방식: 지역별 LQ지수 기준 **응집형 계층적 군집분석**
- 기준: **산업별 LQ지수**
  제조업, 1차산업(농림어업+광업), 관광산업(숙박 및 음식점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대상: 89개 법정 인구감소지역
- 평가: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tukey)

응집형 계층적 군집분석 사전 군집 중심을 설정하지 않고 데이터 간 유사성을 기반으로 군집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Cosine Distance 변수의 구성 비율 및 패턴의 유사성을 반영

Average Linkage 모든 관측치 쌍의 평균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 간 거리를 정의

Elbow Method 군집 수 k에 따른 군집 내 분산의 감소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지점을 최적 군집 수로 선택하는 방법

3. 패널회귀분석

$$Y_{it} = \beta_0 + \beta X_{it} + \gamma C_i + \delta(X_{it} \cdot C_i) + \theta Z_{it} + u_i + \epsilon_{it}$$

- 분석방식: **RE(임의효과) 패널회귀**
- 대상: 89개 지역 x 21개월 = **총 1,869개**
- 하우스만검정을 통해 RE 모형 확정

RE 패널회귀 분석: 개체별 특성을 확률적으로 처리

Y_{it}: 지역 i, 시점 t에서의 인당 100대 생활업종 매출액
X_{it}: 지역 i, 시점 t에서의 외국인 생활인구 수
C_i: 지역 i의 특화산업 군집
Z_{it}: 지역 i, 시점 t에서의 통제변수
u_i: 지역별 랜덤효과
ϵ_{it}: 오차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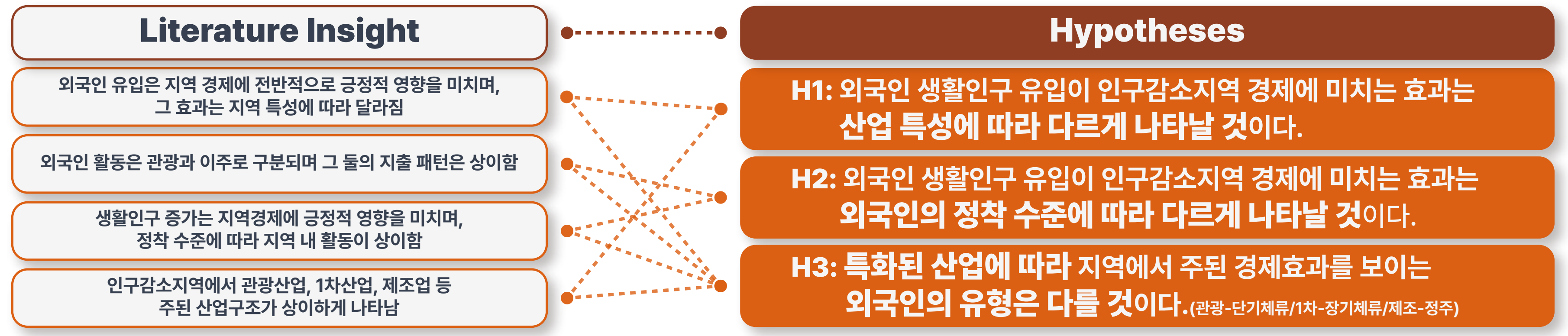
산업특성과 외국인 생활인구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 선정

-회귀분석 대상 변수

대구분	소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시점
종속변수	지역 경제지표	인당 100대 생활업종 매출액	• 100대 생활업종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합계액을 2025.10. 기준으로 지역·월별 매출지수에 해당 값을 곱하여 매출액 계산 • $100\text{대 생활업종 매출액} = \frac{202510\text{ 지역별 매출액}}{202510\text{ 지역별 매출지수}} * \text{월별매출지수}$ • 인당 100대 생활업종 매출액 = 100대 생활업종 매출액 / 생활인구	2024.01. ~ 2025.09.
독립변수	외국인 생활인구	외국인 정주인구	• 국가데이터처 제공 생활인구 데이터 중 '외국인' 추출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024.01. ~ 2025.09.
		외국인 단기체류인구	• 국가데이터처 제공 생활인구 데이터 중 '외국인 체류인구' 처리 • 체류인구: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 평균 체류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3일/4일으로 장단기체류 구분 • 단기체류: 월 3일 이하 체류 • 장기체류: 월 4일 이상 체류	2024.01. ~ 2025.09.
		외국인 장기체류인구		2024.01. ~ 2025.09.
통제변수	경제	재정자립도	• KOSIS 국가통계포털 제공 연도별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 세입) * 100	2024, 2025
		소매 생활업종 업체 수	• 국세청 제공 소매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중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수	2024.01. ~ 2025.09.
		지가지수	• 한국부동산원 제공 • 2026년 1월을 100으로 시군구별 각 월의 지가 지수화	2024.01. ~ 2025.09.
	정책	외국인 관련 제·개정 조례 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 '외국인' 키워드 전체 자치법규 추출 • 기간 내 제개정된 외국인 조례 추출 후 지역별 수 계산	2024.01. ~ 2025.09.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전국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내역 • 지역 연도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 (집행금액 / 배분금액) * 100	2024, 2025
	공간	대도시권 여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상 명시된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 • 광역시 제외	2025
		광역시 여부	• 상위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시'인 기초자치단체	2025

IV. 분석 결과

-가설 설정



Literature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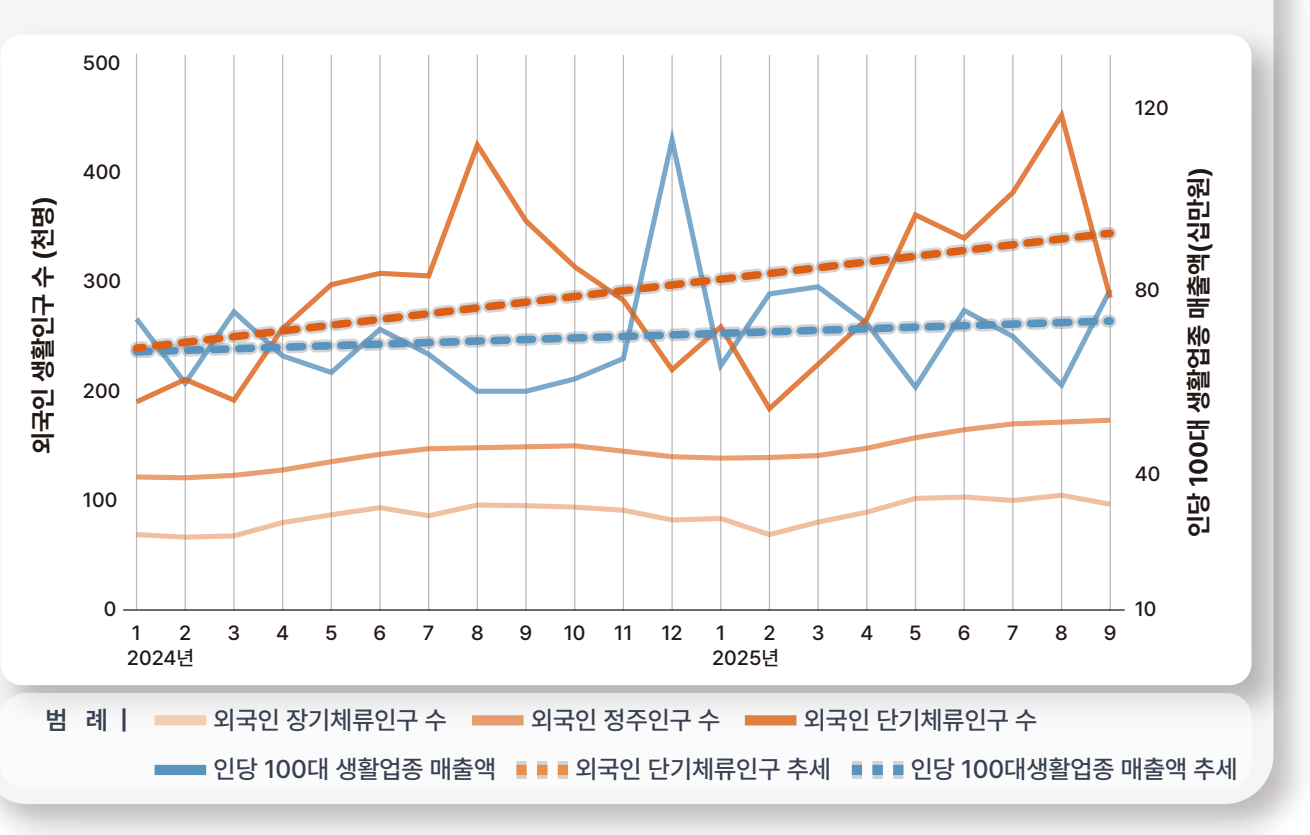
- 외국인 유입은 지역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짐
- 외국인 활동은 관광과 이주로 구분되며 그 둘의 지출 패턴은 상이함
-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착 수준에 따라 지역 내 활동이 상이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산업, 1차산업, 제조업 등 주된 산업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남

Hypotheses

- **H1:**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H2:**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외국인의 정착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H3: 특화된 산업에 따라** 지역에서 주된 경제효과를 보이는 **외국인의 유형은 다를 것이다.**(관광-단기체류/1차-장기체류/제조-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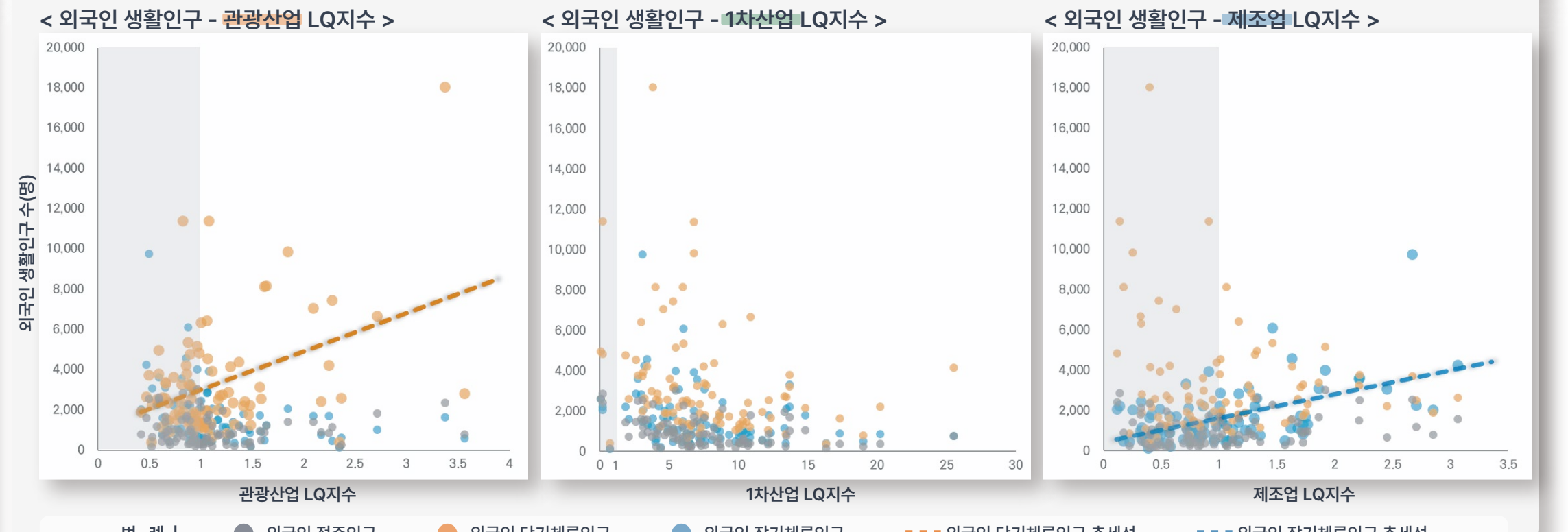
-현황 분석

< 외국인 생활인구 및 인당 매출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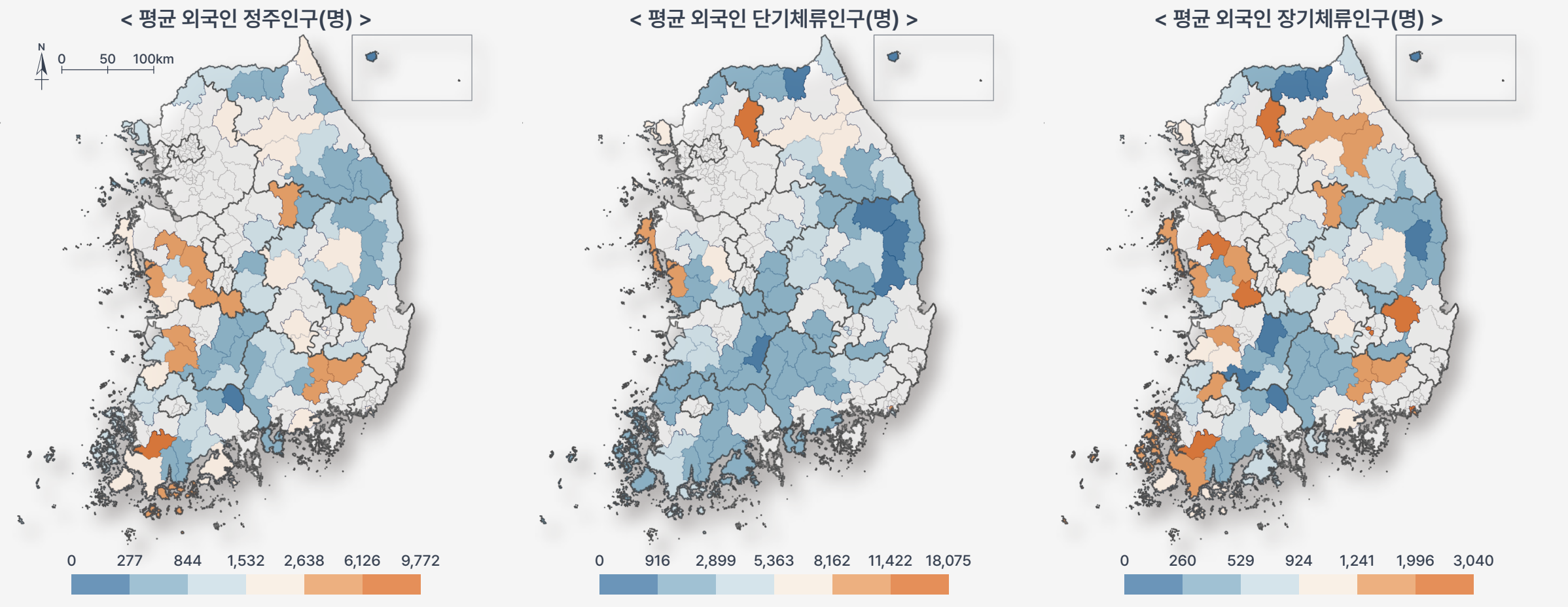
외국인 생활인구와 인당 매출액 증감패턴 유사

< 인구감소지역 특화산업과 외국인생활인구의 관계 >



외국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업특성과 연관이 있음

<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인구 분포 차이 >



산업기반 존재 지역에 주로 분포 **접근성 양호 및 관광지역에 분포** **광역대도시권 지역에 분포**

< 월평균 외국인 생활인구별 상위지역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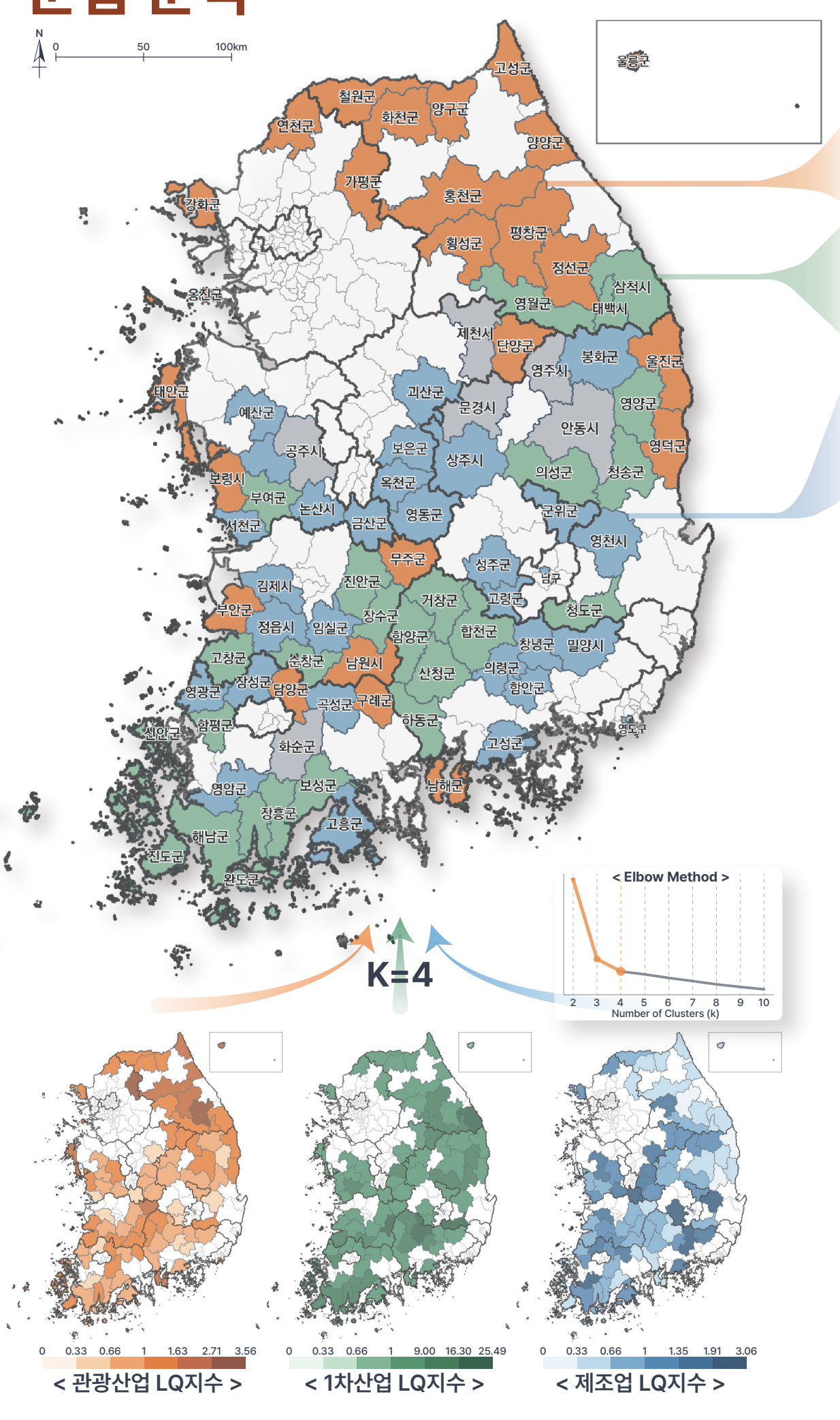
순위	정주인구 상위지역		단기체류인구 상위지역		장기체류인구 상위지역	
1위	전남 영암	9,772	경기 가평	18,075	충남 예산	3,040
2위	충남 논산	6,126	부산 동구	11,422	부산 동구	2,873
3위	경남 밀양	4,600	충남 보령	11,413	대구 서구	2,631
4위	경남 함안	4,276	충남 태안	9,866	전남 영암	2,565
5위	충남 예산	4,028	인천 강화	8,162	경북 영천	2,532

< 월평균 외국인 생활인구별 하위지역 (명) >

순위	정주인구 하위지역		단기체류인구 하위지역		장기체류인구 하위지역	
1위	경북 울릉	148	경북 영양	407	경북 영양	195
2위	전남 구례	226	경북 울릉	421	경북 울릉	202
3위	강원 화천	391	강원 양구	682	전남 구례	216
4위	경북 영양	425	전북 장수	825	전북 진안	236
5위	경북 청송	449	경북 청송	895	강원 화천	242
평균	-	1,641	-	3,272	-	987

정착 수준에 따라 외국인의 공간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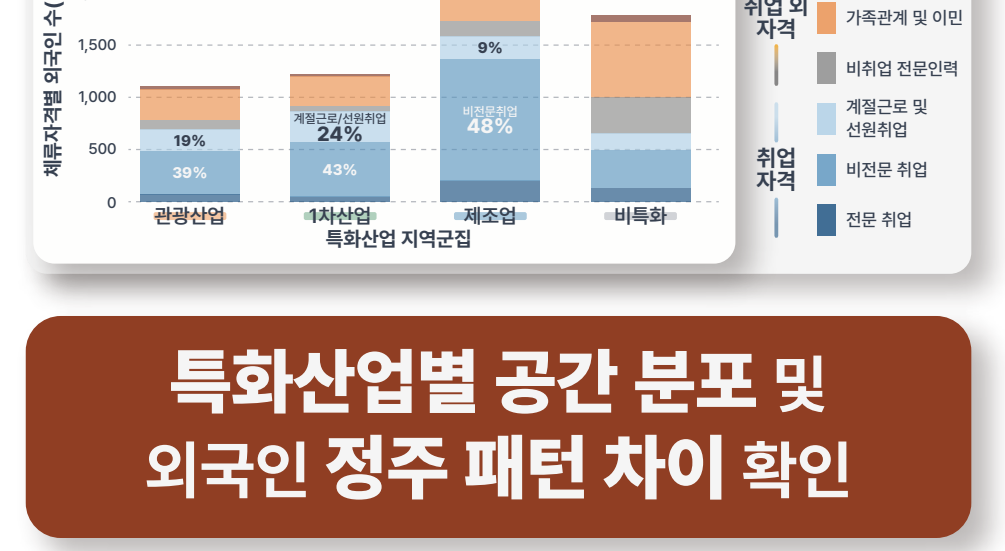
-군집 분석



< 군집별 지방자치단체 >

군집	지방자치단체	특징
관광산업 특화지역 (25개)	인천 강화, 인천 옹진, 경기 연천, 경기 가평, 강원 홍천, 강원 횡성, 강원 평창, 강원 정선, 강원 철원, 강원 화천, 강원 양구, 강원 고성, 강원 양양,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충남 태안, 전북 남원, 전북 무주, 전북 부안, 전남 담양, 전남 구례, 경북 영덕, 경북 울진, 경북 울릉, 경남 남해	경기/강원 일대, 서·동해안 지역
1차산업 특화지역 (26개)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강원 삼척, 강원 영월, 충남 부여, 전북 진안, 전북 장수, 전북 순창, 전북 고창, 전남 보성, 전남 장흥, 전남 강진, 전남 해남, 전남 함평, 전남 완도, 전남 진도,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북 청송, 경북 영양, 경북 청도, 경남 하동, 경남 산청, 경남 함양, 경남 거창, 경남 합천	산간 지역, 전남 해안 지역
제조업 특화지역 (30개)	부산 영도, 대구 서구, 대구 군위, 충북 보은, 충북 옥천, 충북 영동, 충북 괴산, 충남 논산, 충남 금산, 충남 서천, 충남 청양, 충남 예산, 전북 정읍, 전북 김제, 전북 임실, 전남 곡성, 전남 고흥, 전남 영암, 전남 영광, 전남 장성,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북 고령, 경북 성주, 경북 봉화, 경남 밀양, 경남 의령, 경남 함안, 경남 창녕, 경남 고성	광역·대도시권 지역
비특화지역 (8개)	부산 동구, 대구 남구,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경북 영주, 경북 문경	도시 규모가 큰 지역

< 군집별 외국인 체류자격 >



특화산업별 공간 분포 및 외국인 정주 패턴 차이 확인

< 군집별 평균 통계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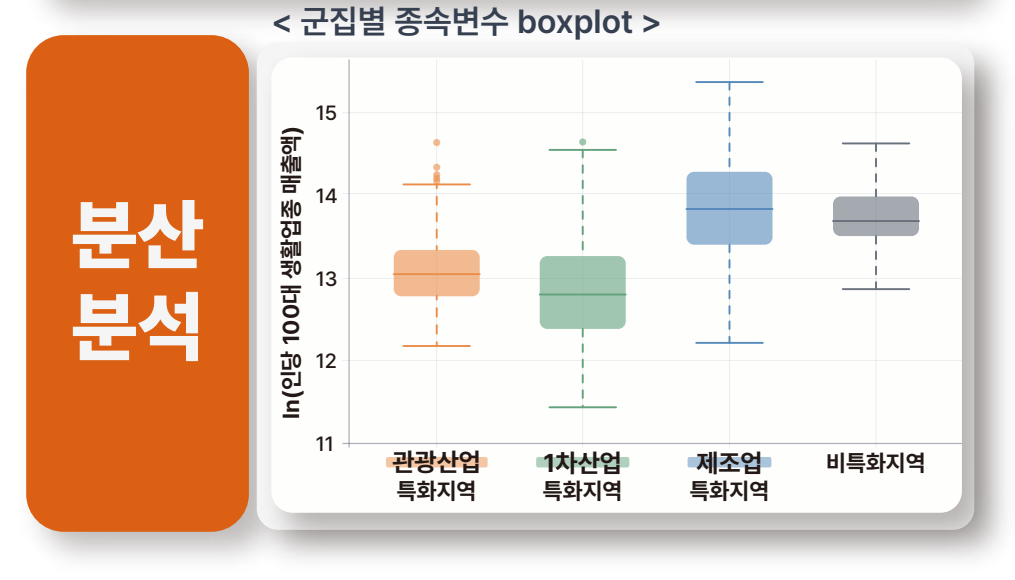
군집	변수	전체	관광산업 특화	1차산업 특화	제조업 특화	비특화
종속변수	인당 100대생활업종 매출액(원)	787,909	478,174	524,445	1,232,083	946,431
통제변수	재정자립도(%)	10.529	11.299	9.122	10.576	12.518
	소매 생활업종 업체 수(개)	1,167.045	996.684	865.075	1,215.337	2,499.732
	지가지수	99.280	99.265	99.295	99.274	99.304
	외국인 관련 제·개정 조례 수(개)	0.092	0.101	0.086	0.098	0.060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39.723	36.012	46.878	35.458	44.063
	대도시권 여부	0.225	0.120	0.154	0.367	0.250
	광역시 여부	0.090	0.080	0.038	0.100	0.250
독립변수	외국인 정주인구(명)	1,641.288 (28%)	1,130.295 (17%)	1,112.962 (29%)	2,428.348 (38%)	2,003.726 (24%)
	외국인 단기체류인구(명)	3,272.318 (55%)	4,668.796 (70%)	2,020.868 (53%)	2,792.706 (44%)	4,774.077 (58%)
	외국인 장기체류인구(명)	987.129 (17%)	891.198 (13%)	682.117 (18%)	1,195.470 (19%)	1,496.929 (18%)
개수		89	25	26	30	8

Note. 독립변수에서 ( ) 안의 숫자는 각 군집 전체 외국인 생활인구 내에서의 해당 변수 비율

군집별 차이: 관광산업 특화지역(매출액↓, 단기체류↑)
1차산업 특화지역(인구규모↓, 장기체류 비율↑)
제조업 특화지역(매출액↑, 정주↑)

분산 분석

< 군집별 종속변수 boxplot >



< 종속변수(ln(인당 100대 생활업종 매출액)) 분산분석 결과 >

군집	평균	표준편차	tukey	F	p-val
관광산업 특화지역(a)	14.738	0.334	b < c*** b < d** a < c***	12.672	<0.0001***
1차산업 특화지역(b)	14.957	0.539			
제조업 특화지역(c)	15.480	0.529			
비특화지역(d)	15.257	0.382			

Note. *p<.1, **p<.05, ***p<.01

군집별 종속변수 평균 차이 유의

-패널 회귀분석

< RE(임의효과) 패널 회귀분석 결과 >

Entities: 89, Time periods: 21, F: 53.008, p: 0.000, overall R-squared: 0.602

구분		변수	B	SE	t	p-val
통제 변수	경제	재정자립도	0.013	0.008	1.552	0.121
		소매 생활업종 업체 수	0.000***	0.000	3.578	0.000
		지가지수	0.023***	0.006	3.917	0.000
	정책	외국인 관련 제·개정 조례 수	0.067***	0.019	3.571	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0.066**	0.026	-2.554	0.011
	공간	대도시권 여부	0.192	0.119	1.614	0.107
		광역시 여부	-0.264*	0.142	-1.853	0.064
지역군집		관광산업 특화지역 더미	1.200**	0.595	2.018	0.044
		1차산업 특화지역 더미	1.344**	0.553	2.432	0.015
		제조업 특화지역 더미	0.718	0.676	1.062	0.288
독립변수		(ln)외국인 정주인구	0.483***	0.086	5.643	0.000
		(ln)외국인 단기체류인구	-0.572***	0.075	-7.624	0.000
		(ln)외국인 장기체류인구	0.119**	0.048	2.454	0.014
상호작용항		(ln)외국인 정주인구 x 관광산업 특화지역	-0.428***	0.096	-4.441	0.000
		(ln)외국인 정주인구 x 1차산업 특화지역	-0.403***	0.108	-3.743	0.000
		(ln)외국인 정주인구 x 제조업 특화지역	-0.206*	0.115	-1.788	0.074
		(ln)외국인 단기체류인구 x 관광산업 특화지역	0.113	0.085	1.336	0.182
		(ln)외국인 단기체류인구 x 1차산업 특화지역	-0.012	0.095	-0.122	0.903
		(ln)외국인 단기체류인구 x 제조업 특화지역	0.018	0.089	0.202	0.840
		(ln)외국인 장기체류인구 x 관광산업 특화지역	0.115*	0.067	1.722	0.085
		(ln)외국인 장기체류인구 x 1차산업 특화지역	0.223***	0.080	2.770	0.006
		(ln)외국인 장기체류인구 x 제조업 특화지역	0.148*	0.081	1.817	0.069

Note. *p<.1, **p<.05, ***p<.01, Hausman test 결과 귀무가설 기각 불가 → RE(임의효과) 모형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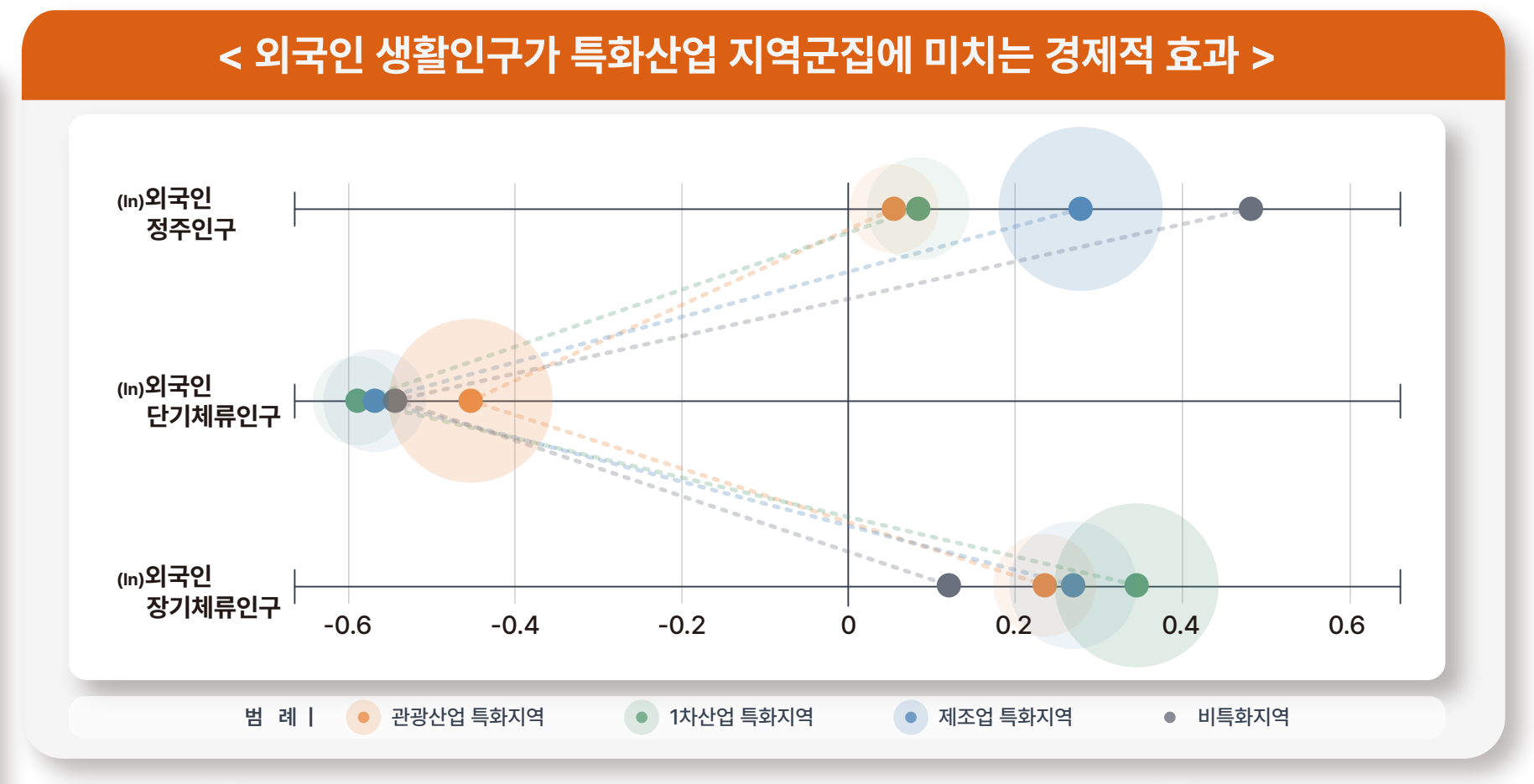
< 외국인 생활인구 총효과 >

	관광산업 특화지역	1차산업 특화지역	제조업 특화지역
(ln)외국인 정주인구	0.056	0.080	0.277***
(ln)외국인 단기체류인구	-0.459***	-0.584***	-0.554***
(ln)외국인 장기체류인구	0.234***	0.341***	0.267***

Note. *p<.1, **p<.05, ***p<.01

상호작용항: 비특화지역 대비 산업특화지역의 상대적 **효과 차이**
총효과: 기본효과 + 상호작용항 → 각 산업특화지역에서의 **최종 효과**

< 외국인 생활인구가 특화산업 지역군집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외국인 정주인구	- 모든 상호작용항에서 유의(-) | **제조업 특화지역**에서 총효과 유의(+) - **소매 생활업종 업체 수**에서 비롯된 상호작용항계수: 비특화지역에 비해 산업 특화지역에서 적은 소매 생활업종 업체 수 → 생활서비스 기반 차이 → 비특화지역 대비 정주 효과 약화 - **제조업 특화지역**에서 큰 (+) 효과: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기능 → 정주 외국인의 반복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필요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 양호 지역에서 **긍정적 효과**
외국인 단기체류인구	- 모든 상호작용항에서 비유의 | 모든 지역군집 총효과 유의(-) - **관광소비의 지역 외 유출:** 인구감소지역 관광을 위해서는 대도시를 거쳐와야하는 구조 → 3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비는 대도시의 대형 소매점, 여행사 등에 귀속될 수 있음 - **단발성 소비** 영향: 인구감소지역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비는 단발성 관광, 쇼핑, 숙박에 그칠 수 있음 100대 생활업종 매출액을 우회하는 효과일 가능성 존재	방문 규모 확대보다 **지역 내 체류 확대, 소비 구조 전환** 필요
외국인 장기체류인구	- **모든 상호작용항**에서 유의(+) | **모든 지역군집** 총효과 유의(+) - **반복적 소비** 구조: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숙박·식료품·교통·의료 등 반복적 생활소비 형성 - **1차산업 특화지역**에서 가장 큰 (+) 효과: 비전문취업, 계절근로·선원취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 중장기 노동수요와 생활소비 결합 → 반복적 소비 구조 형성	가장 **안정적**으로 긍정적 효과 중장기 노동수요와 생활소비 **연계 강화**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의 경제효과는 유입 규모가 아닌 체류 방식 × 산업구조의 결합에 의해 결정됨

-특화지역별 정책 제언

< 관광산업 특화지역 >

분석 결과
1. 단기체류 **규모 최대** ↔ 인당 **매출액 최저**
2. 방문 규모 ✕ 지역 경제 효과
3. 단기 방문 ✕ 지역 소비 전환

현행 정책 검토
가평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강화군: 외국인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지원
보령시·태안군·양양군: 관광자원 및 체류형 프로그램 연계 강화
방문객 수(규모) 기반 인센티브 중심 → 한계

정책 제언
단기 방문 유입 → 체류 시간 확보 → 지역 내 소비 전환
1. 인센티브 기준 실제 소비 기반 지표로 전환
2. 체류형 소비 동선 구축 및 관광-지역 산업 연계 강화
3. 재방문·장기체류 유도 마케팅 및 콘텐츠 개발

< 1차산업 특화지역 >

분석 결과
1. 장기체류 효과 최대
2. 비전문취업 + 계절근로·선원취업 67% ➡ 중장기 노동수요
3. 중장기 노동수요 x 일정 기간 체류 ➡ 노동공급 + 생활소비

현행 정책 검토
완도군: 외국인 관리팀 운영, 문화쉼터 운영
신안군: 고용주 대상 인권·3대 의무보험 교육
하동군: 외국인 한국어학당 운영
지역별 외국인 정착 지원책 마련 중

정책 제언
노동력 → 지역사회 통합 → 생활소비 활성화
1. 근로자 기숙사·의료·통역·안전교육 등 생활기반 지원 강화
2. 지역화폐·바우처 등 지역 상권과의 연결 방안 마련
3. 한국어 교육·소통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통합 유도

< 제조업 특화지역 >

분석 결과
1. 정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 (+) 유의
2. 평균 정주인구 최대 | 인당 매출액 최대
3. 산업기반 + 생활서비스 기반 ➡ 생산자 + 소비자로 기능

현행 정책 검토
밀양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지원
충청남도, 함안군: 2026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농업법인 지역특화형 비자 고용특례
비자 발급 및 채용 조건 완화

정책 제언
고용 및 산업 연계 → 정주 기반 조성 → 생활소비 활성화
1.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전환 등 산업 연계 강화
2. 주거·기숙사 환경개선·통근지원 등 정주 안정성 제고
3. 지역상권·생활서비스 이용 촉진 및 소상공인 연계

규모 중심의 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V.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

외국인 정주인구	제조업 특화지역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 확인 비특화군집 유의한 정(+)의 효과 산업특화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약화
외국인 단기체류인구	모든 지역에서 유의한 부(-)의 효과 방문 규모가 지역경제 효과로 직결되지 않음 확인
외국인 장기체류인구	1차산업 특화지역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정(+)의 효과 중장기 노동수요로 노동+소비 구조 형성

가설 검증

H1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H2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외국인의 정착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H3	특화된 산업에 따라 지역에서 주된 경제효과를 보이는 외국인의 유형은 다를 것이다.(관광-단기체류/1차-장기체류/제조-정주) **1차산업·제조업:** 가설대로 각각 **장기체류**와 **정주인구**의 효과가 가장 큼 **관광산업:** 가설과 달리 단기체류는 음의 효과, **장기체류** 효과가 가장 큼	△

결 론

I.	유입 규모 ≠ 경제효과 경제효과 = 정착 수준 x 산업 구조
II.	장기체류 외국인: 안정적 기여 집단 → 노동공급 + 생활소비 형성
III.	정주 외국인: 인프라 양호 지역 기여 → 생산자 + 소비자 기능

-연구의 의의

1. 외국인 생활인구의 이질성 규명

기존 연구: 외국인을 **단일 집합**으로 분석
본 연구: **정착 수준**에 따라 **정주·단기/장기체류**로 구분

외국인 정주·단기/장기체류인구의 경제 효과 차이 확인

2. 산업 x 외국인 생활인구 효과 확인

특화산업에 따른 지역 군집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산업특성과 외국인 생활인구 **상호작용항 효과 분석**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의 조건부 발생 입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 제기

3.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책의 기반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전체 분석**
각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정책 발전 방향 제언**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및 효과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의 근거